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 발제자료

2018. 11. 15

김 용 하
(순 천 향 대 학 교)

Contents

Ⅰ. 사회보장제도 현 위상

1. 한국의 사회보장 문제
2.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Ⅱ. 사회보장 발전의 한계

1. 사회보장 제도의 부정합
2. 보장과 재원조달 불균형
3. 공동체 의식 미성숙

Ⅲ.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1. 새로운 사회보장 비전 설정
2.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 구축

Ⅰ. 사회보장 문제 : 양극화

2016년 소득5분위 배율 상승 전환, 소득 불평등도 악화

소득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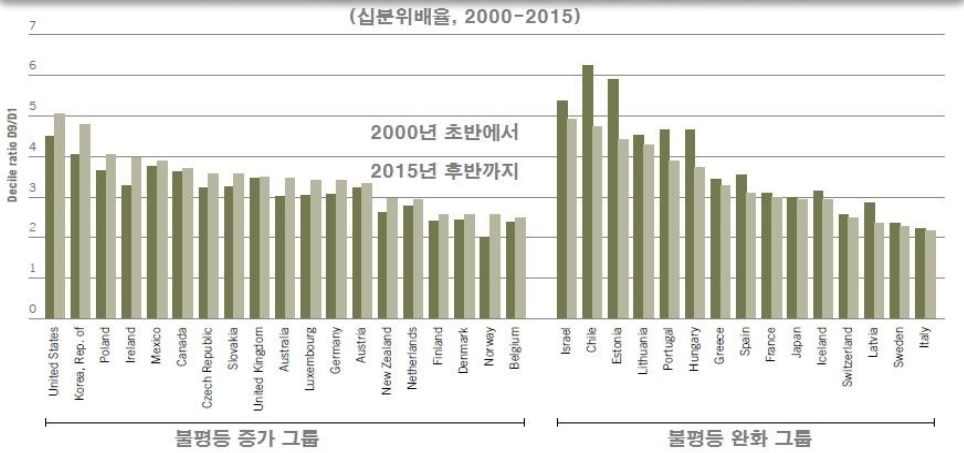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2인이상 가구)

(단위 : 배)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11	5.66	4.89	5.19	5.15	4.80
2012	5.44	4.76	4.98	5.05	4.69
2013	5.23	4.68	5.05	4.61	4.55
2014	5.15	4.58	4.73	4.54	4.45
2015	4.86	4.19	4.46	4.37	4.22
2016	5.02	4.51	4.81	4.63	4.49
2017	5.35	4.73	5.18	4.61	– *
2018	5.95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 개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등)
* 연간 소득분배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18년 12월 공표 예정)

OECD 회원국의 임금불평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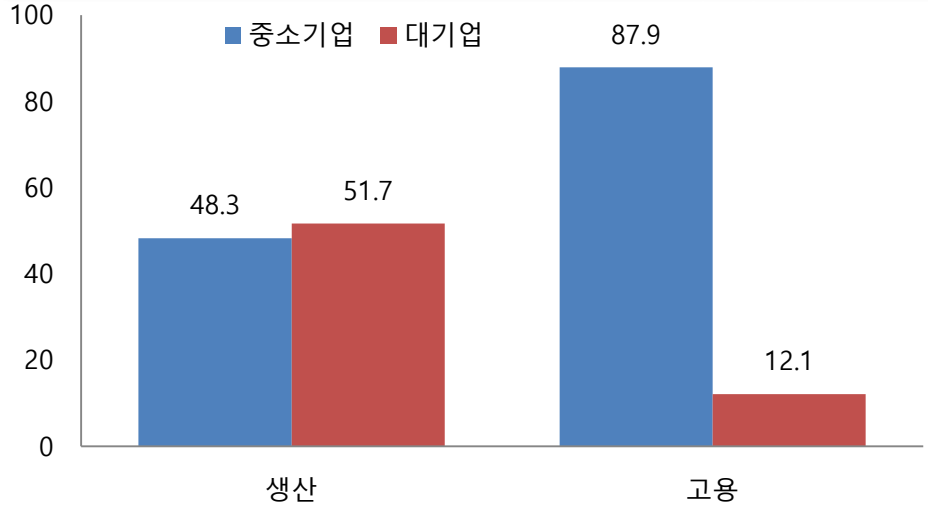
자료: OECD Earnings Database

- **소득 5분위 배율 2010년 이래 계속 하락하여 왔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 (2018년 2분기 고소득층 상승 저소득층 하락 : 5.23배)**
- OECD 국가의 임금 불평등 (상위10%/하위10%) 은 2000년 보다 악화됨
- 노인빈곤율은 46.7 % (2016년) 으로 OECD국가 중 1위
- 2018년 8월 실업자수 113.3만명, 청년실업률 10.0%
- 학력별 (고졸:대졸=100:145), 성별 (여성:남성=100:152)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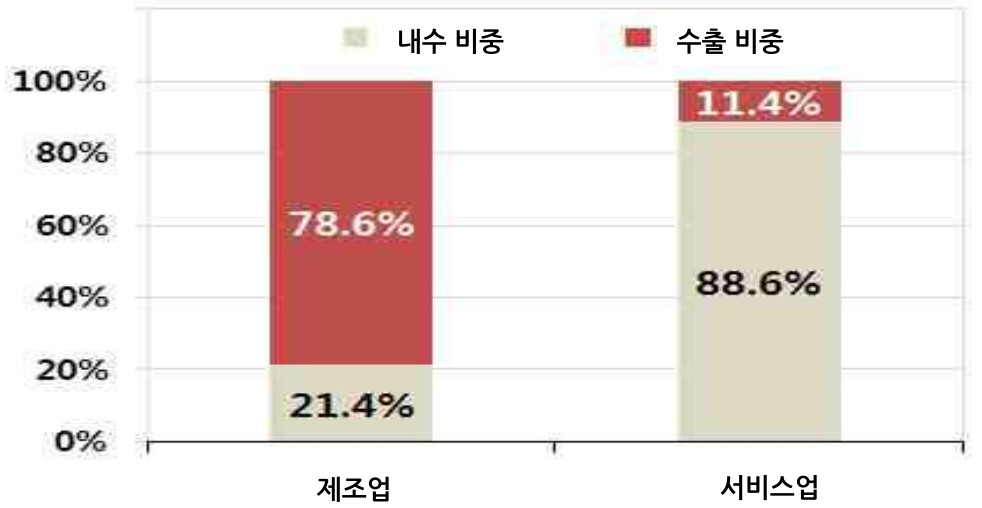
Ⅰ. 사회보장 문제 : 양극화

생산부문과 고용 부문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과 고용 비중 (중기연합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내수 및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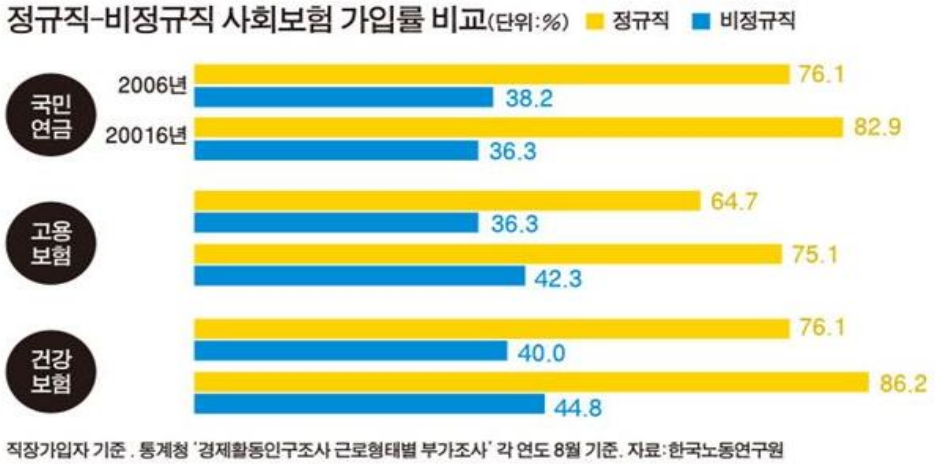


- **대기업은 생산액에 비해서 고용 비중은 과소, 87.9%가 중소기업에서 고용**
- 제조업 생산액의 78.6%를 수출, 서비스업 생산액은 88.6%가 내수
-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빠르게 증가 : ’09 (13.9%) ➔ ’14 (18.5%)
- 대기업 1% 성장의 하청기업 낙수효과 : 현대자동차 (0.52%), 삼성전자 (0.68%)
-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간 선 순환구조 약화

Ⅰ. 사회보장 문제 : 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답보상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다양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직종

· 화물(연대)운송차주	· 덤프종사자	· 컨테이너기사
· 홍익회 판매원(철도매점)	· 간병인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송사 구성작가	· 에니메이션 작가
· 프로(야구)선수(단)	· 신문판매 및 광고 외근원	· 수도검침원
· 영화산업종사자 스태프	· 화장품 판매원	· 자동차판매원
· 음료·식품 판매원	·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 시청료징수원
· 오케스트라 단원	· 텔레마케이터	· 택배기사(개인, 알선 등)
· 모집인(카드, 대출)	· 학원 강사	· A/S 기사탁송기사
· 방문판매직	· 정수기 코디	· 문화예술인
· 헤어디자이너	· 콘크리트 펌프기사	· 아쿠르트 판매원
· 화장품 방문 판매원	· 백화점-할인점 판촉판매원	· IT 분야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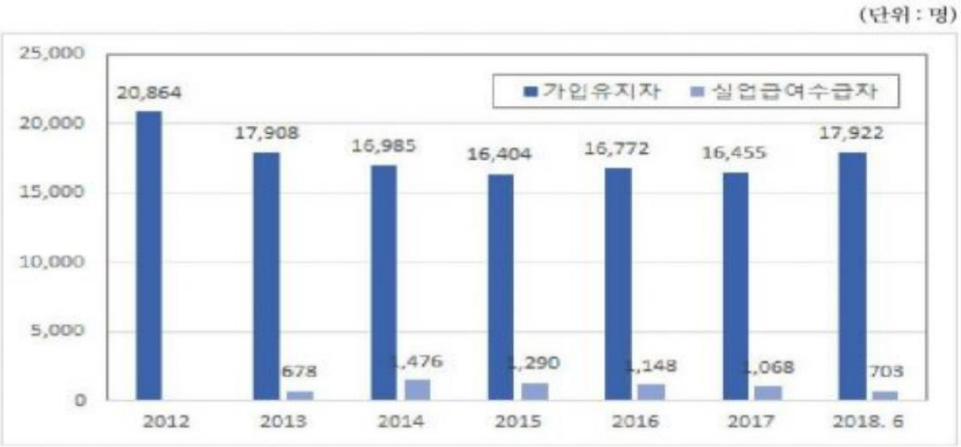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2013.1.2.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0% 내외 수준**
- 정규직의 경우 2006 -16년간 일부 개선되었으나 80% 내외 수준
- 근로자 성격이 사실상 강하면서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계층 다수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전통적 노사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
- 비정규직 상당수는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 (비용부담 요인+제도적 요인)

Ⅰ. 사회보장 문제 : 사회보장 사각지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극히 미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이



주 : 실업급여 수급자 2018. 6은 2018. 1~6 누적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내부자료.

공적연금 적용 현황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 **한국의 비임금자 비율(25.4%)은 OECD 평균 14.8%보다 높음**
-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568.2만명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소위 노동보험에서는 자영자 존재 미미
- 국민건강보험에는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적용은 제한적
- 현재의 사회보험의 틀로서는 사각지대 해소 한계

Ⅰ. 사회보장 문제 : 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의 축소로 빈곤문제 해결 가능한가?

문재인정부의 빈곤 사각지대 정책

차상위 계층의 규모

< 차상위 계층 규모 >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비수급 빈곤층	118만명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최저 생계비 ~ 120%	86만명	최저 생계비 ~ 120%	67만명	최저 생계비 ~ 120%	68만명	중위 40% ~50%	85만명	중위 40% ~50%	51만명
계 (차상위) 263만명		계 (차상위) 170만명		계 (차상위) 185만명		계 (차상위) 203만명		계 (차상위) 144만명	

* '03년, '06년, '10년 최저생계비, '14년 실태조사의 중위소득, '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비수급 빈곤층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7년 현재 93만명**
-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정책 추진
- 2022년까지 현재의 1/3 규모로 축소 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빈곤가구와 현실적 빈곤율의 괴리
- 기초보장대상가구와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 사이의 광범한 사각지대 존재

Ⅰ. 경제사회 환경변화 : 저성장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닮은 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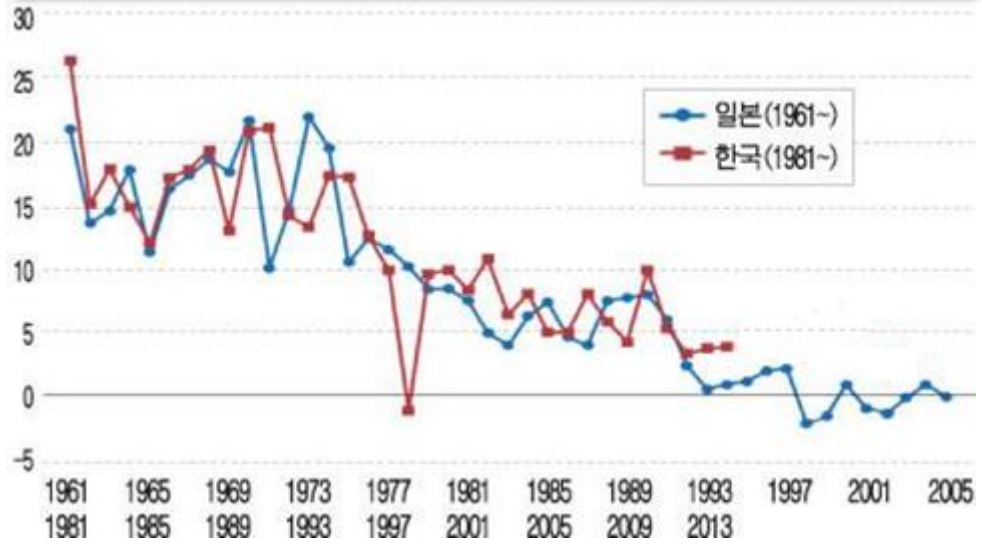
잠재전망률 전망 시나리오(중위) 요인별 기여도

(단위: %, %p)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9.4	5.0	1.5	3.6
1991-2000	6.7	4.1	0.9	1.9
2001-2010	4.3	2.0	0.7	1.6
2011-2020	3.2	1.2	0.7	1.4
2021-2030	2.6	1.1	0.0	1.5
2031-2040	1.6	0.7	-0.4	1.3
2041-2050	1.3	0.5	-0.5	1.3
2051-2060	1.1	0.5	-0.6	1.2
2061-2070	0.8	0.3	-0.8	1.2
2071-2080	1.0	0.4	-0.6	1.2
2081-2090	0.9	0.4	-0.7	1.2
2091-2100	0.8	0.3	-0.7	1.2

주: 1) 증가율 및 기여도는 10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금 다를 수 있음.
2) 2015년 이전은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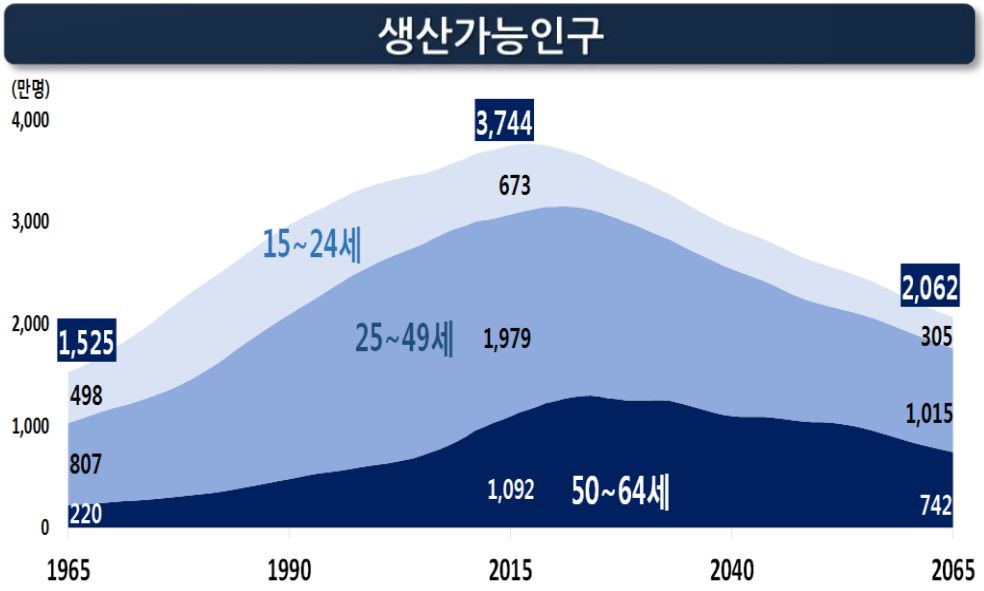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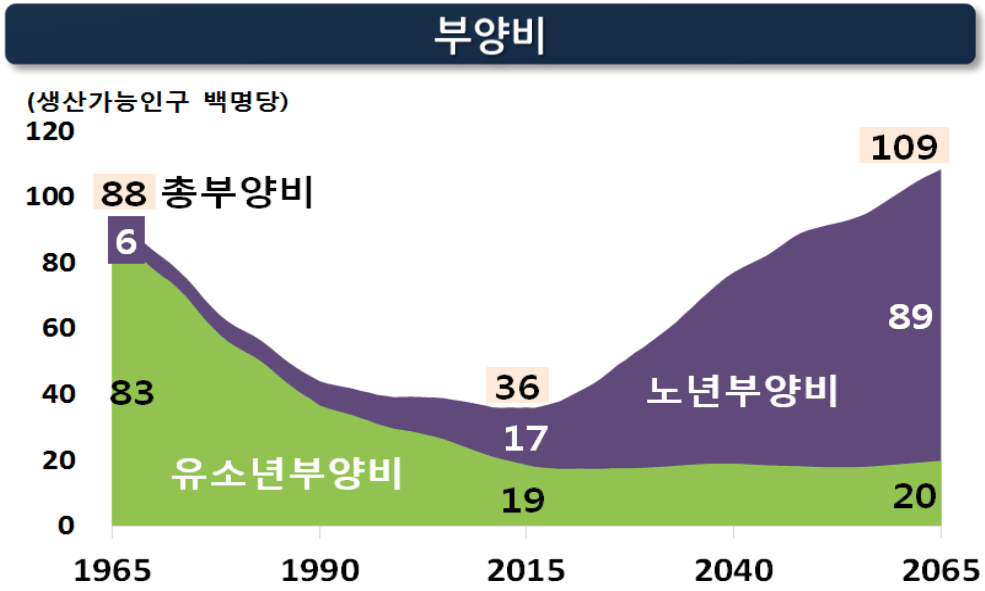


- **'80년대 9.4% 성장에서, 6.7% ('90년대) ➔ 4.3%('00년대) ➔ 3.2%('10년대)**
- '20년대 2.6%에서 1.6%('30년대) ➔1.3% ('40년대) ➔ 1.1%('50년대)로 하향
- 물적자본, 취업자수, 총요소생산성 모두 감소
- 한국의 저성장은 일본의 저성장추세와 20년의 시차를 두고 답습
- '19년 2.8% 성장률 전망 ➔ 구조적 저성장 + 경기 침체

Ⅰ. 경제사회 환경변화 : 고령화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7년), 노년부양률 급상승, 합계출산율 1.0선 붕괴





- **저출산의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 급변 (통계청)**
- 고학력화, 청년실업, 만혼화, 출산기피가 겹치면서 출산율 하락
- 25~45세 주력 생산연령층은 이미 감소 시작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 증가
-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각종의 거대위험 요소 증가

Ⅰ. 경제사회 환경변화 : 고령화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7년), 노년부양비 급상승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

-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인구총량보다도 인구구조가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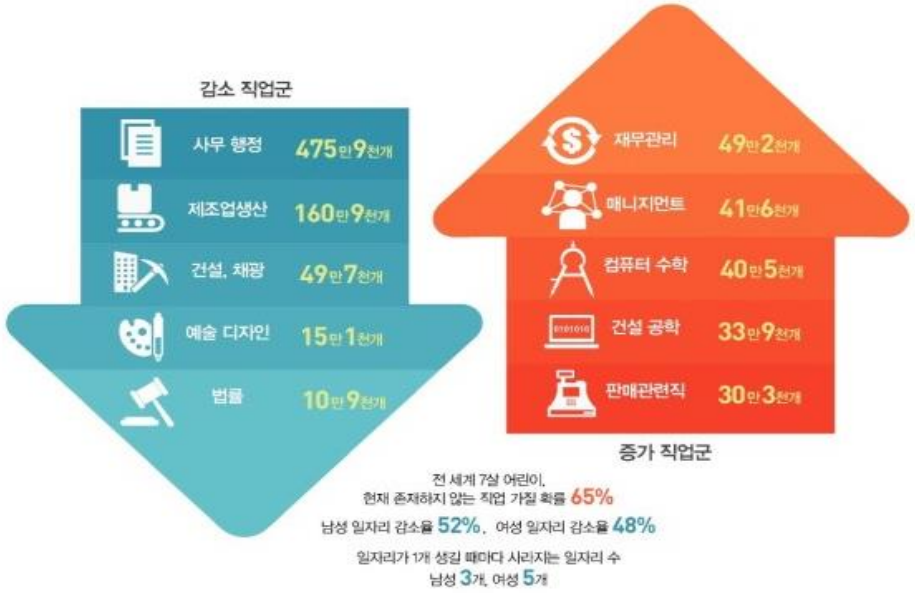
주요국의 노인인구비율과 출산률

-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에 이르면 25% 내외의 노인인구비율을 유지
-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Ⅰ. 경제사회 환경변화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노동 및 고용 형태와 삶의 방식에서 큰 변화

일자리의 감소와 비정형 근로의 증가 가능성



-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AI와 로봇 등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단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사무직 전문직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음
- 특히, 정형적 근로 감소, 비정형 근로의 증가 가능성에 주목

4차 산업혁명은 보건복지서비스의 격변 예고

- 평균수명의 연장 ➔ 건강한 고령사회
- 치료 중심 ➔ 예방 중심
- 노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AI 및 로봇의 활용과 대체
- 노인 의료비 증가 ➔ 의료비 절감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시대 구분

구분	1.0 (공중보건의 시대)	2.0 (질병치료의 시대)	3.0 (건강수명의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혁신	인두접종 개발	페니실린 개발	인간게놈프로젝트
목적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 · 치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만족도(+경험)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 전자, 건설, 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시민)	환자	환자+정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변화	•예방접종, 상하수도 보급 •청진기, X-RAY 발명 •의사 양성체계 확립	•제약/의료기기/병원의 산업화 •신약 및 치료법 개발	•유전자 조기진단 •맞춤치료제 등장 •U-헬스의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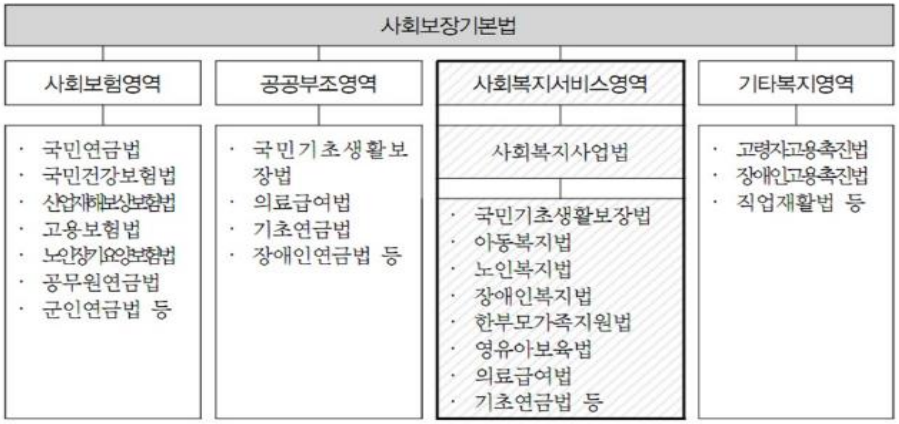
자료: 헬스케어 3.0 –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SERI보고서, 2012.8

Ⅱ. 사회보장제도 부정합 : 이론과 제도의 경직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와 이론의 틀 한계는 심화

제도의 경직성

사회보장제도 관련 입법 체계



- 사회보장 제도가 여러 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
- 사회보장 적용 대상의 누락과 중복
- 사회보장 급여의 누락과 중복
- 사회보장 제도 간의 정합성 부족
- 사회보장 제도 간의 형평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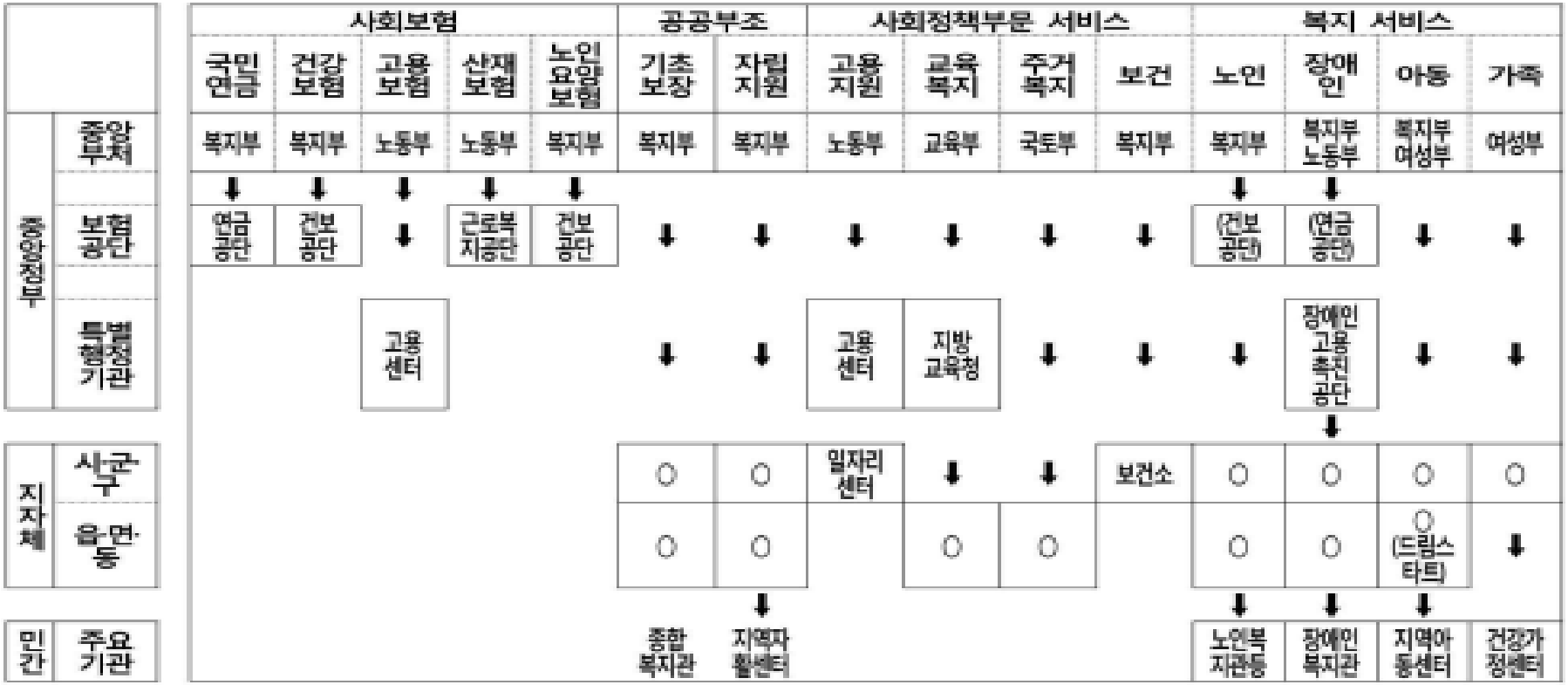
이론의 경직성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의 이론적인 제도의 틀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
- 기초연금 : 사회수당 or 공공부조
- 직역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업연금
- 근로장려세제 (2019년 예산 4.0조원) : ?

구 분	기 여	자산조사	내 용
사회보험	O	X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권리성, 사회적 적절성 원리
공공부조	X	O	최저생활 보장, 최후의 안전망, 집중급여(목표효율성), 소득재분배 효과, 시혜성, 낙인 발생, 납세자와 수급자의 계층 간 대립 가능성, 저축동기약화, 빈곤의 함정
사회수당	X	X	인구학적 조건(연령 등)에 따른 보편적 프로그램(아동·장애수당), 인간존엄성 향상, 사회통합 달성, 많은 예산 필요,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데모그란트(Demogrant)

Ⅱ. 사회보장제도 부정합 : 제도와 부처의 분립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입된 제도가 부처별로 분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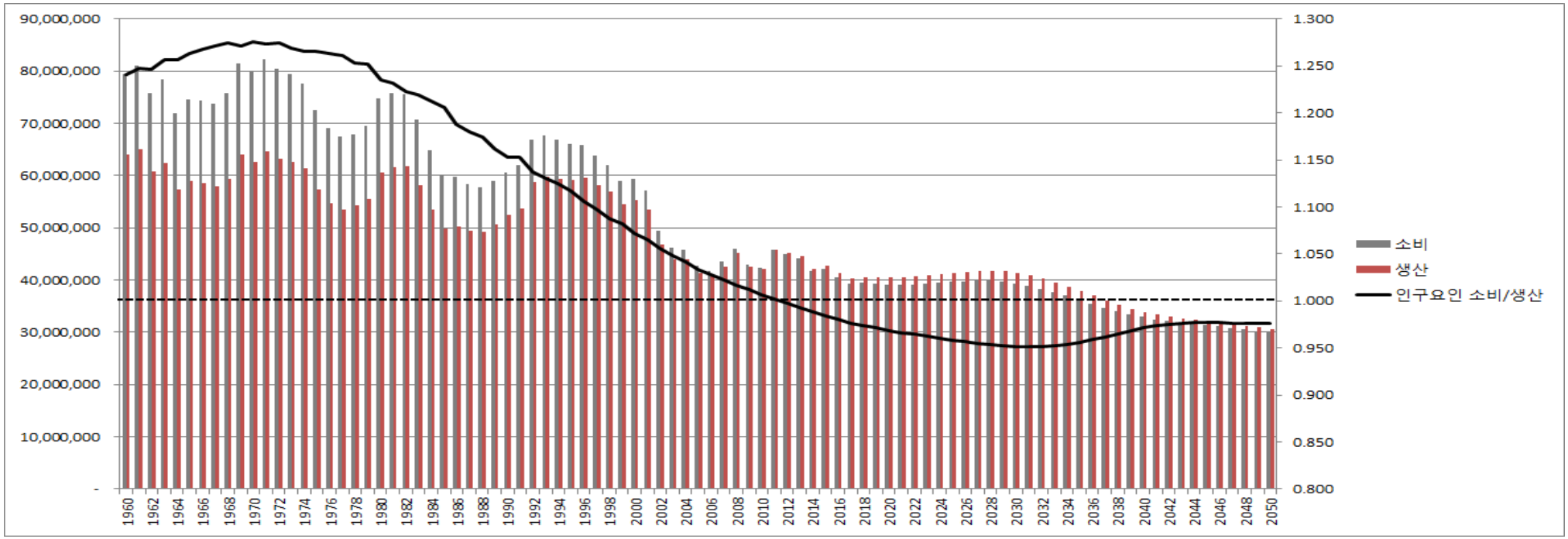


자료: 강혜규 외(2011).

- 사회보장 제도별로 각각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 부처별로 분립된 각각의 제도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영역이 겹치는 부문은 부처별 영역 다툼이 잠재
- 기능별로 종합적인 재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음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간 소비와 생산의 배분에 영향

출생연도별 인구집단의 소비와 생산의 배분 비율 변화



- 고령화와 저출산은 출산율이 높았던 연령계층과 낮았던 연령계층 사이의 소득이전의 불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림은 1960년생부터 2050년생에 이르기 까지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인 1960-1974년 생 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이전 구조를, 저출산 세대인 2000년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득이전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2012년 이후 출생자는 생산 ≫ 소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Ⅱ. 보장과 재원조달 불균형 : 세대간 불균형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 증가 →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민연금)

연도별 이용률 추이(기본안)

(단위: %)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제4차	5.2	9.0	14.9	20.8	26.8	29.7	29.5	28.8
제3차	5.2	8.0	12.8	17.4	21.4	22.6	22.6	23.6

연도별 이용률 추이(대안)

(단위: %)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저출산	5.2	9.0	15.0	21.3	28.6	33.3	35.2	34.9
출산율 1.05	5.2	9.0	15.0	21.5	29.3	34.7	37.7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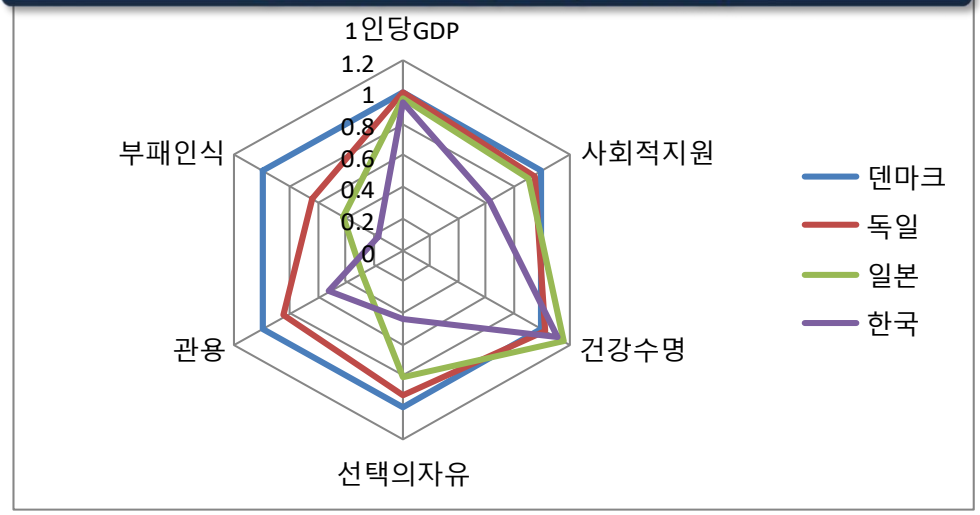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 ✓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 2088년에는 28.8%로 상향
- ✓ 3차 재정추계시에는 2060년은 21.4%, 2088년은 23.6%
- ✓ 최근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면 심각성은 더욱 높아짐
- ✓ 2017년 출산율 1.05 가정시 2060년 보험료율은 29.3%로 높아져야 함
- ✓ 2088년 보험료율은 37.7%로 지속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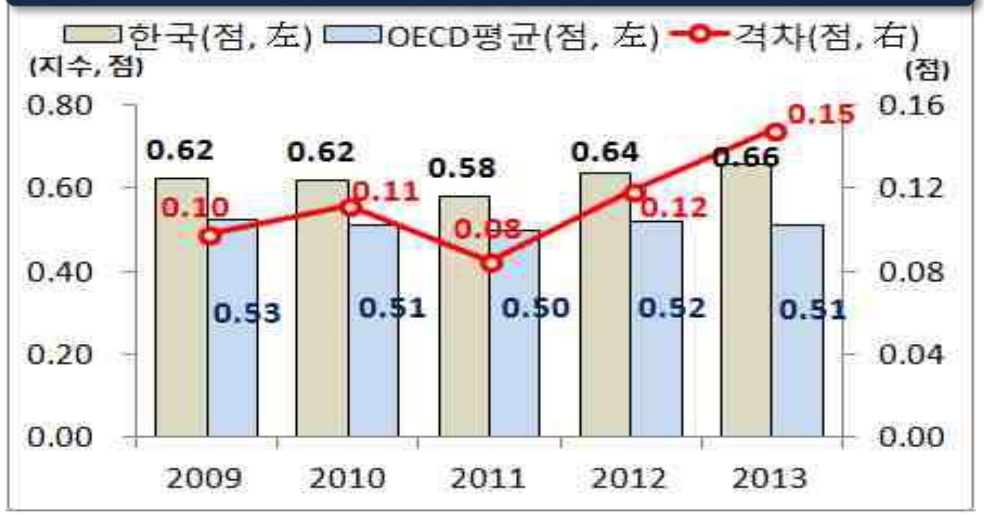
Ⅱ. 공동체 의식 미성숙 : 행복지수와 갈등지수

소득수준에 비해 불행도가 높고, 사회갈등도 증가

행복지수 구성(한국,2016년)



사회갈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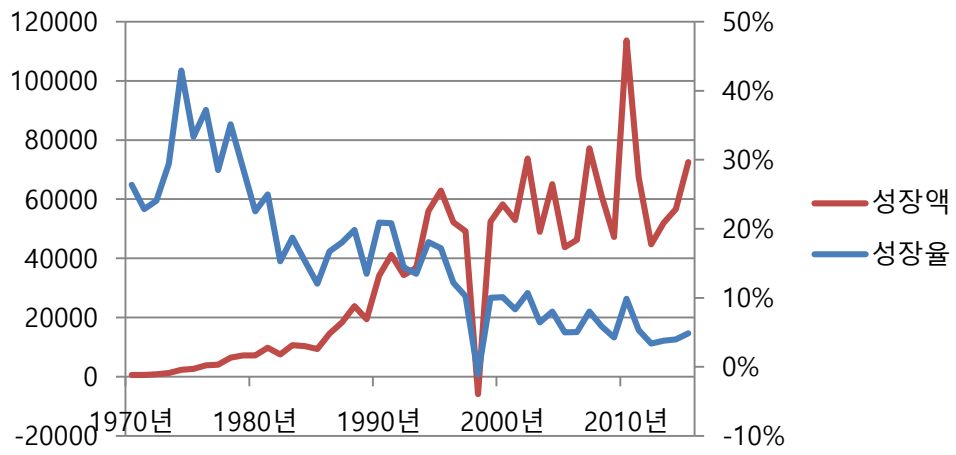


- **UN 『Happiness Report 2018』 한국은 57위, 일본 54위, 독일 15위, 핀란드가 1위**
- 1인당 GDP, 건강수명 등은 상위, 부패·관용·사회적 지원·선택의 자유 등 하위
-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34위, 합계출산율 34위, 최장 근로시간 등이 문제
- 사회갈등지수 (현대경제연구원) 높아지고, 사회갈등 비용 증가
-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 : 가족기능 축소 ➔ 개인사회로 급속 변화 (혼술, 혼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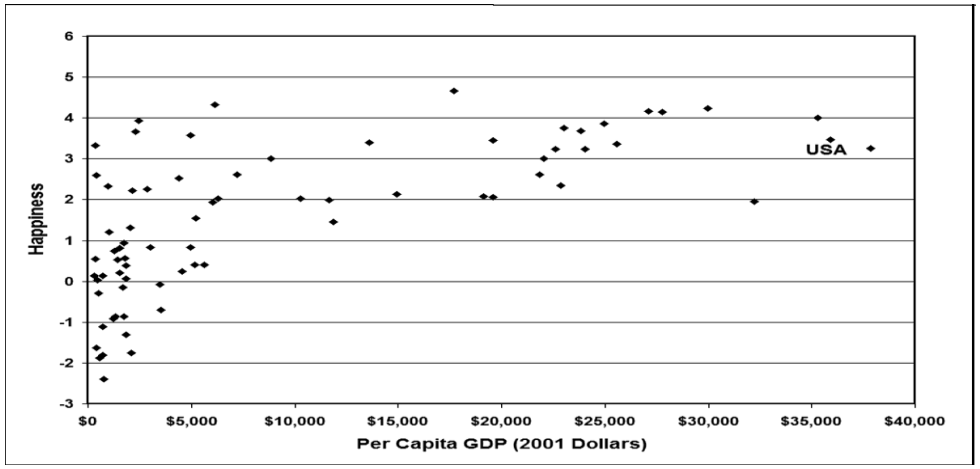
Ⅱ. 공동체 의식 미성숙 : 경제수준 대비 낮은 행복도

경제수준에 걸맞는 행복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시스템 개편 필요

성장액과 성장률



1인당 GDP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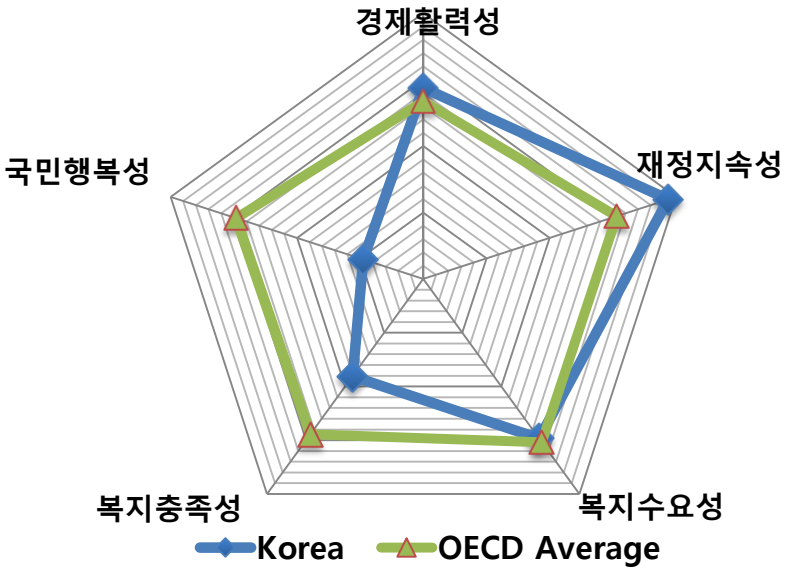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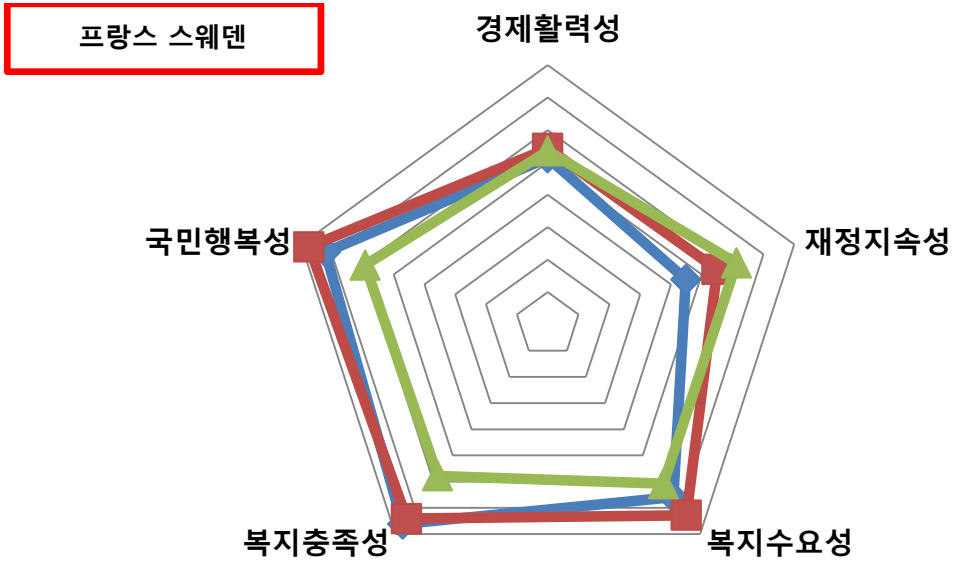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이후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 (기저효과)**
- **경제수준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물질적 만족도가 행복에 주는 영향은 체감**
- 노동집약적 성장 ➔자본집약적 성장 ➔ 사회적 지체요인 극복으로 성장 한계 극복
- 물질적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정신문화 선진화 필요
-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복관, 새로운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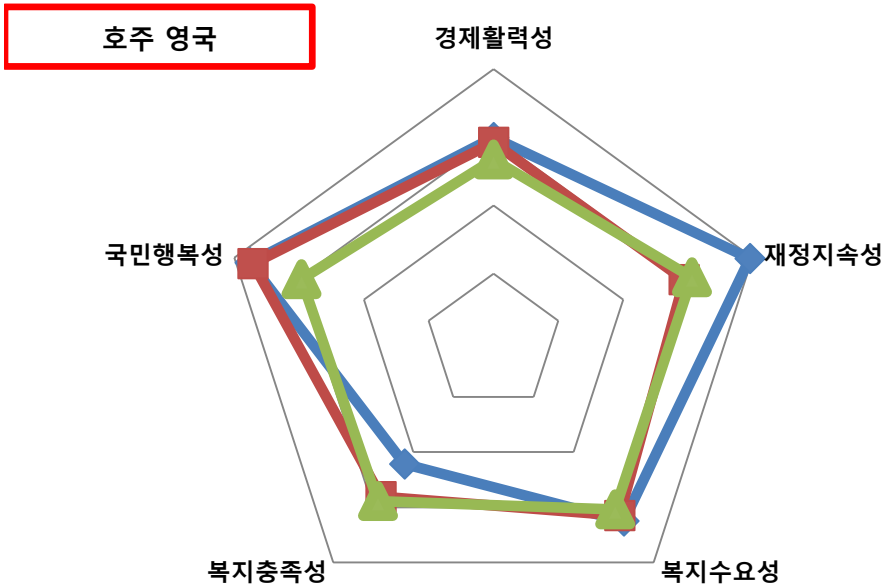
Ⅱ. 공동체 의식 미성숙 : 불균형 구조와 지속가능성

복지국가의 유형과 지속가능성

국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미국, 스위스
독일,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Ⅲ. 새로운 사회보장 비전 : 경제 사회 프레임의 대전환

성장사회 ➔ 성숙사회

Dennis Gabor

성숙사회 (The Mature Society)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

- Gabor 제시하는 "Future Society" : 안정성
- 다이나믹 변화의 예측능력 제고와 효과적 관리
- 기술발전 ➔ 지적 공공서비스 고용 확대
- 가족 및 가정교육의 중시
- 과도한 학습부담 및 경쟁질서 완화
- 전인적 교육, 평생 학습
- 사회책임의식 있는 자유 추구
- 일과 여유 조화, 이기주의 극복 (공동체 존중)

Ⅲ. 새로운 사회보장 비전 : 경제 사회 프레임의 대전환

"개천의 미꾸라지(鰍)도 행복한 세상"

고도성장과정에서의 '개천에서 용(龍) 나오는 정책'은 한계

상위 20%가 80%를 점유하는'2:8 법칙'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
전방위적,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국가로는 선진화 한계
경쟁적 성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조화

경쟁지향 계층의 리더십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되, 경쟁상태 유지
경쟁중립 계층은 국가 중추로서 땀과 노력을 요구하되 상응하는 보상
경쟁제한 계층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로 인간다운 삶 보장

자료: 정재훈(2013)

불확실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차적 보장 시스템
기회의 균등과 기여와 희생에 상응한 공정한 1차적 배분 시스템
다양한 갈등 해결 시스템과 함께 발산 에너지를 융합하는 시스템

Ⅲ. 새로운 사회보장 비전 :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정책은 선진 외국에서도 추진

1) 총수요를 강화하는 정책
2)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균등한 기회 보장
3) 시장집중도 완화와 지대추구 행위 근절
4) 계층이동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 反시장 · 反기업 정책이 문제

Policy making and policy shaping for inclusive growth

Policy Design
-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re understood and forecasted
- A whole-of-government vision for Inclusive Growth steers, aligns the public sector
- Policy frameworks tackle multidimensionality and seek policy coherence across sectors and levels of government
- Solid evidence (ex ante, ex post) assesses distributional impacts

Policy Implementation
- Spending decisions are aligned with medium and longer term Inclusive Growth considerations
- Coordination, whole-of-government steering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and enable pursuit of joined-up outcomes
- Innovation in service delivery facilitates access across social groups and locations

Policy Evaluation
- Assessment of distributional impact of outcomes that matter for well-being
- Responsive changes are made based on beneficiary assessment of services & service providers
- Comprehensive evaluation approaches and feedback loops inform new policy packages, including from independent audit and control mechanisms

Inclusive Institutions for Inclusive Policy Making
- Openness and engagement support inclusive problem identification and decision making
- Transparency and integrity tools help avert policy decisions that benefit the few
- Participatory mechanisms promote an inclusiv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 Inclusive public sector workforce reflects society and can better engage in delivering
-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enables opportunities, particularly of vulnerable groups

자료: OECD(2016). The Governance of Inclusive Growth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기본 개념

저비용 고효율 복지 시스템

-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 질병·장애·노령·재해·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

사회안전망 체계화

- 맞춤형 복지체계 확립
- 사회보험역할 재정립
- 최저보장-적정 보장 이원화

생애주기 고용·보건·복지 통합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 생애주기별 건강보장
- 노동-복지의 연계 통합

고용창출성장 기여복지구축

- 고용우선복지 체계
- 시장기능의 활용 체계
- 사회재의 가치 극대화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정보화 등의 최대한 활용
- 수요자 중심 통합 관리
- 관리 이전비용의 최소화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 복지자원의 효과적 확보
- 사회주체간 역할 재정립
- 가족기능지원 사회보장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사회안전망 체계화

기본 방향

▶ 사회보장 개념 전환

- 선별적 제한적 복지개념 ➡ 생애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

▶ 사회보장의 중심축

- 갹출제 사회보험 ➡ 포괄적 국민보험

▶ 다층적 보장시스템 구축

- 사회적 위험에 대해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으로 2원화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고용·보건·복지서비스 통합

기 본 방 향

▶ **교육 및 훈련**

- 평생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 가능 시스템 정비

▶ **고용**

-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통한 일의 만족도와 효율성 제고

▶ **보건**

-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의 안전망 가동

▶ **각종 보건 및 복지통합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고용창출지향 시스템

기 본 방 향

- 현금급여 제공은 지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우선 제공

- 시설·기관 중심의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 "경쟁 및 책임경영"시스템 도입 및 내부시장원리 (internal market principle) 강화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관리 및 제도 효율성 제고

기 본 방 향

- 사회보험료와 국세 징수 통합 일원화
-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틀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 서비스 행정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분립적 관리운영체계 통합을 통한 비용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가계·기업·사회·국가 공조

기 본 방 향

- 적정한 부담 증가와 연계된 맞춤형 복지영역 확보
- 부담과 급여의 균형적 재분배 시스템 정립
- 재원: 가계,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복지공조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간 비용분담 구조 개선과 비효과적인 지원체계 정비
-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발휘 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역할 제고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재구조화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필요

- 기초연금 급여비용은 2028년 GDP 대비 1.4%(급여액 A값의 10%, 수급대상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분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복지재정 압박 예상
  * 신정부 국정과제: 기초연금 단계적 30만원, 국민연금 명목급여율 50%

- 국민연금 급여의 불충분성 : 명목적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50% 수준에 접근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소득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 특수직역연금 개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국민연금 : 1소득자 1연금 ➔ 1인 1연금
기초연금 : 최저소득(연금)보장제도로 전환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거나 수급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성격으로 제공 : 2022년까지 30만원 수준
- 국민연금 1인 1연금 체계로 전진적 이행
- 국민연금보험료 : 부과방식적 균형보험료 ≤ 적립방식적 균형보험료
-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세로 조달 (사회보장세)
- 퇴직연금 4%, 국민연금 DC 형 임의가입 (소득대체율10% 수준)
- 국민연금 불입 소득상한 (평균의 250%], 소득하한 조정[평균의 25%]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소득보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 특수직역연금 개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특수직역연금 개혁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립기금 소진

2015년말 법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재정효과는 한계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3층 통합형 체계
군인연금은 2019년 법 개정, 2020년 시행 필요 (군인 특수성 반영)

과거 가입기간에 대한 미적립 부채액은 별도로 적립하는 개방형 수지균형체계로 보완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소득보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 특수직역연금 개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공공부조제도는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등화하여 전체적인 공공부조대상자의 수를 적게 유지
- 근로무능력자에게 초기에는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유지하고, 경제사정 개선과 함께 적정 수준(National Optimum) 보장으로 전환
- 근로유능력자에게는 고용취업지원에 역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별도 제도로 분리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건강보장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통합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와 통합 관리하되, 산재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는 재원을 구분하여 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환자 등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되, 건강보험 중증 요양급여와의 기능재조정
- 공공의료부문 역할 정립: 1차 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확립
- 긴급 상병 수당 제도 도입 시행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재해보장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직종에 따라 분립된 산재보험체계 전면 통합 방안 마련 (선원, 농어민 등)
- 산재위험 높은 특수직종 근로자 (택배, 퀵서비스 등) 의무적용 (보험료지원)
- 통근재해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민영 자동차 보험과 역할조정
- 산재발생률 획기적 저하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 개선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고용보장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1차적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 고용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 및 책임 강화
  - 비정규직 자영자 고용보호
    - 청년 등 최초 무갹출 고용보험 적용
      - 자발적 실업자 중 질병 등의 경우는 고용보험 지급

- 2차적 국민복지 기본선으로서 연령, 성, 장애 유무에 따른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고용증진 노력

- 고용보험 급여의 현실화 ➔ 구직급여 상한 상향조정
  ➔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강화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복지재원 조달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복지비용 총량 비율 한도 관리 : 2065년까지 GDP 대비 30% 수준 확대**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통합관리

- 양출제입 ➔ 양입제출
-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

▶ **조세지원적 성격의 급여제도의 실효성 검증**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리누리)

▶ **기초연금 등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회보장세 신설 검토**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복지재원 조달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8대 사회보험 재정 및 서비스의 통합 관리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납입과 국민 포괄 보장 제도 시행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 시행
- 기초연금,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비용 전액 중앙정부 부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재조정에 따른 포괄적인 세원의 조정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관리시스템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

- 사회보험료와 국세 징수 행정 통합➔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
- 사회보험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제공
- 민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적정수준 지원과 상응한 서비스 질의 제고와 책임의식 제고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복지전달체계 횡적·종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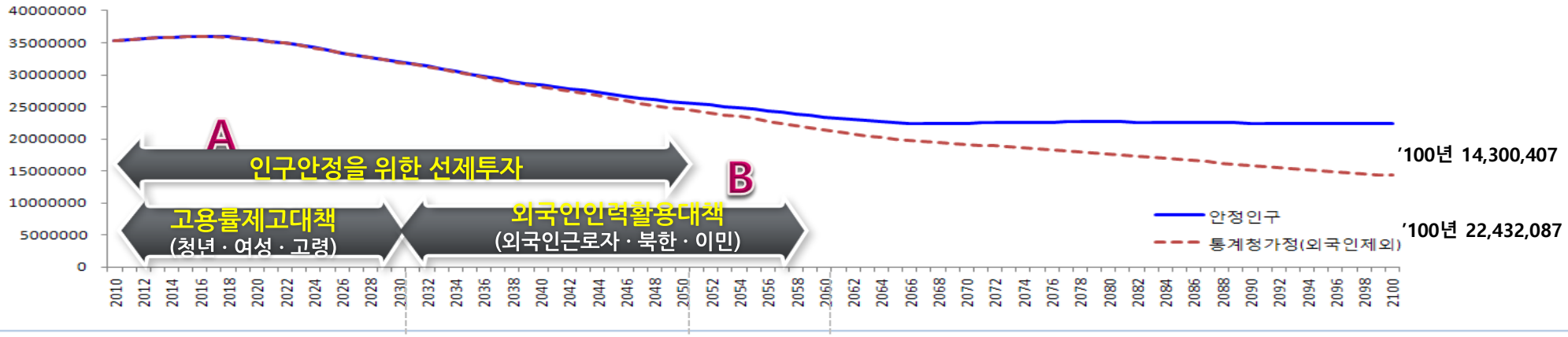
1) 단계별 인구관리 정책

- **인구 변동기에의 체계적 대응 (기간별 탄력적 적용)**
  - 안정인구의 생산가능인구와 최근 출산수준 유지시 생산가능인구 간의 차이는 초기에 크지 않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빠르게 커지는 추세 - '30년 20만명, '40년 118만명, '50년 197만명, '60년 275만명, '70년 405만명, '100년 603만명 등 증가폭 상승
- **생산가능인구의 갭이 시기별로 다르므로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 필요**
  - '30년까지 총량적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미세하므로 노동력 수급은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mismatching) 해소, 여성고용률 제고, 퇴직고령자 활용 등 국내인력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30년 이후부터 인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50년대 후반까지 기존인력활용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안 긴요

(A) : 지금부터 태어난 인구가 '3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층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50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으로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00만명 수준에서 유지토록 적극적이고 선제적 인구투자 정책 필요

(B) : 출산율이 단기간에 2.1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외국인인력과 북한인력의 활용대책을 보완적으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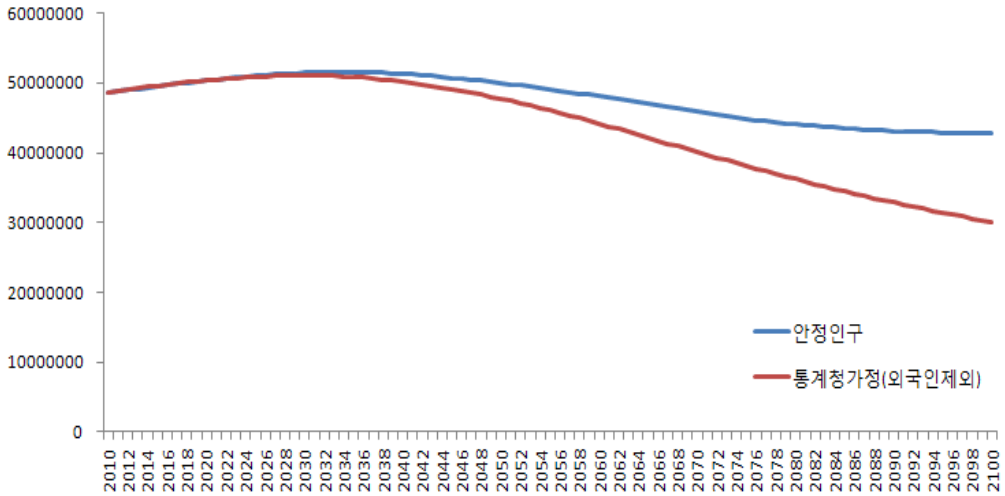
미래 인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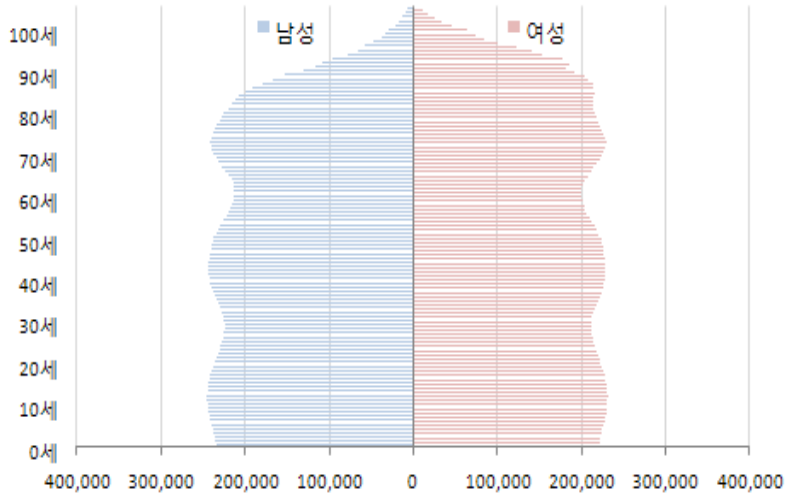


2) 안정인구 도출

- **인구 유지가 가능한 합계출산율인 2.1명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인구 고령화 대처 가능**
  - 출산율이 2.1이 된다 하여도 한국 인구는 4,300만명선으로 수렴될 전망
    * 4,300만명은 88올림픽 직후 고도성장기인 1989년 인구규모(4,307만명)로서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고령사회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은 선제투자적 성격
    * 노인인구비율도 약 30% 수준으로 점차 하향 수렴 (최대 37.1%)
    * 인구구성도 역 피라미드형에서 장방형구조로 전환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안정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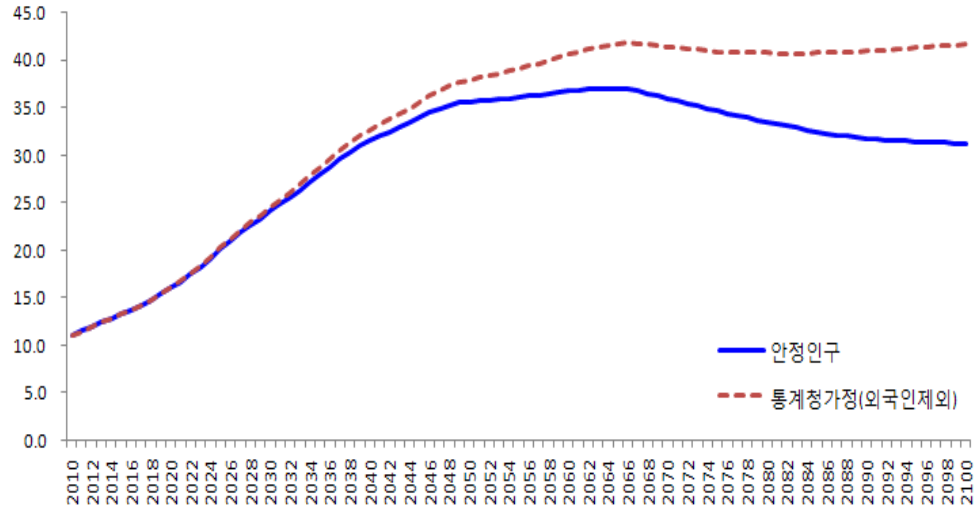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고령화 저출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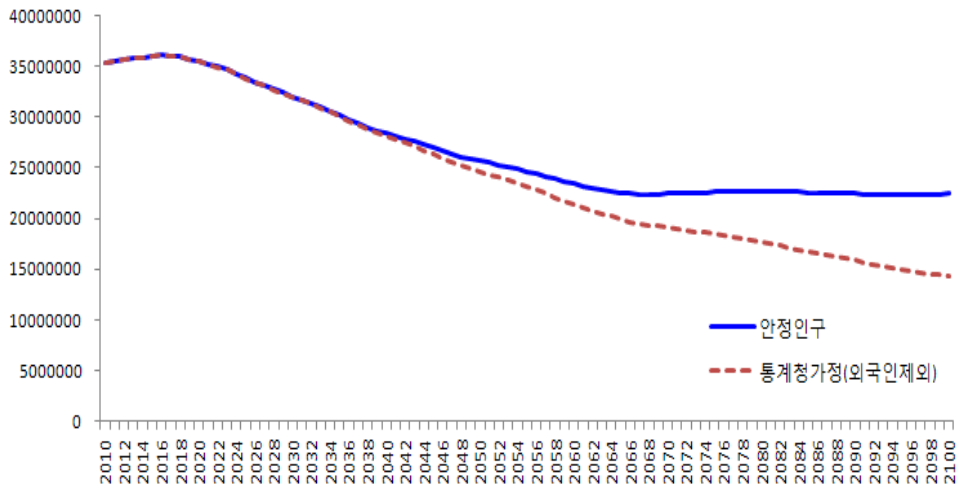
- **안정인구 경로는 ’10년 4,852만에서 ’34년 5,15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50년 5,001만 ➜ ’75년 4,486만 ➜ ’100년경부터 약 4,300만명(4,285만) 수준에서 안정**
  - 기존의 인구구조로 인해 인구대체출산율 도달 후 인구안정화에 50년 소요
  - 안정인구 규모는 2100년 기준으로 최근 출산율 유지시(통계청 가정, ’10년 1.23 ➜ ’35년 이후 1.38 유지)의 3,013만명에 비해 각각 약 1,300만명 차이

    * 안정인구의 고령화수준은 ’50년 35.6%로 최근 출산수준 유지시 37.4%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안정화되는 ’100년경에는 31.3%로 다른 인구의 고령화수준 42.3%에 비해 큰 차이(10% 포인트) 발생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생산가능인구 (15~64세)



Ⅲ. 사회보장 시스템 재구축 : 고령화 저출산 대응

○ 출산정책 : 기본방향

- 정책수준 UPGRADE(사각지대 해소, 국민체감도 제고 등) ⇨ 결혼지원, 보육책임 강화
- 양성평등제고 ⇨ 일과 생활 균형
- 다양한 가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 보육지원 체계 개편 보완 ⇨ 방과후 아동 전문돌봄 서비스로 전환 (동일 예산으로 연봉 3천만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가능)

보육 지원

- 보육 사각지대 해소
- 민간보육서비스 질 제고
- 근로와 보육서비스 간 연계 강화
- 획일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 개선

다양한가정 지원

- 이혼가정 자녀 양육 책임 강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괄적 지원

출산은 목표가 아닌 결과 지표

결혼 지원

- 취업준비기간 단축
- 결혼비용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 지자체 · 공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육아 휴직 급여 개선

감사합니다